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1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27일 (음력 4월 23일) 월요일

정부, 5·18 미기밀문서 확보 외교적 노력 절실

한국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5·18 관련 미국 기밀문서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범정부 차원의 기밀 해제 프로젝트'를 추진해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민행과 관련한 미국 자료를 이관받은 것처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 단체와 광주·전남시민사회는 지난 24일부터 미 기밀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

아르헨티나, 수년간 미 기밀자료 확보에 외교력 집중
미국서 2016년~지난달 군부독재 자료 원본 이관받아
5·18 핵심 의혹규명 위한 자료 일체 확보 요구 '붐몰'

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5·18 관련 미국 미공개 자료 공개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22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5·18관련 미국 기밀문서 원본 공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 국민 1114명이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동안 5·18재단, 5·18기록관, 연구진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는 등 미국에 남겨진 5·18 관련 자료 확보에 힘썼다.

지난 2017년 타임 서클 미국 기자가 광주시와 5·18기록관 등에 기증한 353쪽 분량 문서(체로키, 미국 중앙정보부 기밀문서 등)를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연구 단체로서 미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확보한 자료도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삭제된 상태였다.

최근 미국 501정보여단 정보요원의 증언대로 미국 기밀문서에는 발포·학살 경위, 헬기 사격, 공작 활동, 안매장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 기밀문서를 조속히 확보해 5·18 진상 규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십 년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73~1983년 비델라 군사정권의 납치·고문·암살과 이를 비호한 내용이 담긴 미 비밀문서(16개 기관 보유 5만여 쪽)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사이 이관받은 바 있다.

최용주 5·18재단 비상임연구원은 "5·18 미 기밀문서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미국의 개입 정도와 한국이 놓치고 있는(신군부 세력의 5·18 자료 폐기·왜곡 등 고려) 광주항쟁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가해자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적 문제가 충돌한다. 이에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5·18 진상 규명과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 한미 관계 발전 등을 강조해 미 기밀문서 이관에 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외교부가 미 국무부·국방부 등과 꾸준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와 진상 규명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포괄·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 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서 5·18 미 기밀문서 제공을 공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 원본을 이관받아 5·18 핵심 의혹을 밝히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은홍 기자



이른 피서객 몰린 해운대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 즐기고 있다.

전남도, 폭염·집중호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내달 28일까지 791개소 대상 실시

전남도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사회복지시설 791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강원 동해안 산불, 지진 발생 등으로 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 대비 상태도 포함해 진행한다.

노인복지시설 511개소, 장애인시설 234개소, 자활센터 24개소, 사회복지관 15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 등 총 79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시설 자체점검, 공무원 현장점검, 민관 합동점검 순으로 진행한다.

1단계 안전점검은 지난 24일까지 이뤄졌다.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안전교육, 책임보험 가입,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 10개 분야, 55개 항목의 안전점검

표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토록 했다.

2단계 안전점검은 27일부터 이뤄진다.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이 각 시설에서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에 입력한 자체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마지막 3단계 안전점검은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안전관리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김정환 기자



막말

청와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 짓을 하지 않느냐'고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에 '연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편 가르치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인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결국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 본보 창간 12주년

기념행사 5월 31일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